

월간 주요동향

»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	81
» 부문별 주요기사	
— 대내경제	97
— 농업 및 식량	103
— 대외경제	106
— 남북경협	115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

1. 총괄

지난 5월 20일 마침내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5월 24일 오전에는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통일·국방·외교 장관들의 대북제재조치가 발표됨으로써 천안함 사태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이 일단 정리되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연루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당초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를 잠재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제적 호응을 얻어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우리 정부차원의 대북제재 내용을 보면 서해에서 한미 합동 대잠수함 기동훈련, 대북심리전 전개, PSI 적극 참여,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운항중단과 같은 군사안보적 조치나 북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과 같은 외교적 움직임도 북한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 겠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전면중단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충격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사업의 중단 및 지난 2년간 남북교역의 위축 등으로 이미 외환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 온 북한경제에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이 가져올 부담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남북교역의 중단에서 발생하는 외환부족은 곧 바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억제로 이어져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교역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발표가 임박해 오자 북한의 반응은 매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우선 합동조사단 발표 직전일인 19일 이미 북한은 조평통 명의로 천안함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정부의 둔 자작극이라는 장문의 “고발장”을 발표한 이후, 우리측의 천안함 사태에 관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뿐만 아니라 5월 30일 오전 북한은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10만여명을 동원하여 남한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물론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북한 내부단속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북한당국의 중요한 움직임은 권력승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며, 이번의 군중동원도 천안함 사태의 결과가 흑시라도 북한의 권력승계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 화폐교환조치 이후 경제상황 악화의 결과 내부민심 이반이 극단적인 수준에 달한 것이 북한의 현실이며, 따라서 천안함 사건이후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일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파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도 시기상조일 것이지만, 적어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발생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두고 볼 때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과연 국방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보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될 것인가 하는 점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충격과 함께 남북경제관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대통령 담화발표직후 이미 우리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교역의 중단을 감행하게 되었고, 현재 남북간 해상수송로는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다. 일단 남북간 교역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등 사건의 사후적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보아 단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전체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지난해에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고, 금년에 들어서는 전체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교역 중단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교역과 일반 남북교역은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면적인 비교는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의 경우, 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국내의 본사와의 교역으로서 북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이며, 북한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우리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외화가득 효과는 일반교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일반 상업교역은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제3국 중개상을 매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제3국과의 교역과 다를 바 없으며,

여기에서 남기는 흑자는 북한의 수입에 긴요한 자금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북 교역의 60% 이상을 넘어서는 개성공단 관련 교역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상품교역이나 위탁가공의 중단이 가져다 주는 외화가득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개성공단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물론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남북한이 대칭적일 수는 없다. 북한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전체교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교역의 중단이 갖는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대북 교역의 비중은 전체 대외교역의 0.2~0.3%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충격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종사하는 약 700여개 대북교역업체들이 갖는 피해는 단순히 이미 진행 중인 교역중단에서 오는 손실보다는 그간 북한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 혹은 개인적인 신뢰관계의 상실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사업의 인프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기 보다는 민족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남북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 왔다.

물론 지금까지 축적해 온 남북교역 인프라의 상실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문제의 재발위험도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것이며, 대북제재의 단계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복원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신중함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2. 대내 경제

지난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북한경제의 제반 가격변수들이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말 (평양 기준) 1달러 당 6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이 지난 5월 25일에는 다시 1,000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1kg당 2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쌀 가격 역시 다시 400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가격 변수의 움직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북한경제의 월간 동향을 사실 위주로 기술하는 이 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다소 본질적인 질문을 토론하기가 버거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교역의 중단과 같은 북한의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내부 역시 커다란 영향

을 받을 전망이어서 이처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현재 북한의 가격 변수들이 갖는 움직임의 의미를 한번쯤은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변수 - 시장 환율

현재 북한의 가격변수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아마도 ‘(북한 원화의) 시장 환율’ 일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난해 말 실시되어 현재까지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폐개혁은 본질적으로 ‘화폐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이는 경제의 명목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장 환율이다. 화폐개혁은 무엇보다 북한의 원화에 대한 신뢰와 수요(선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이 시장 환율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 환율은 북한의 모든 (시장)가격변수를 직접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중국의 쌀 가격에 시장 환율을 곱하고, 여기에 일정한 마크업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시장 환율이 변할 경우 북한의 쌀 가격은 응당 상응하는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일반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북한 사회 전체를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의 급등으로 시장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식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써 북한 사회 전체가 불안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 환율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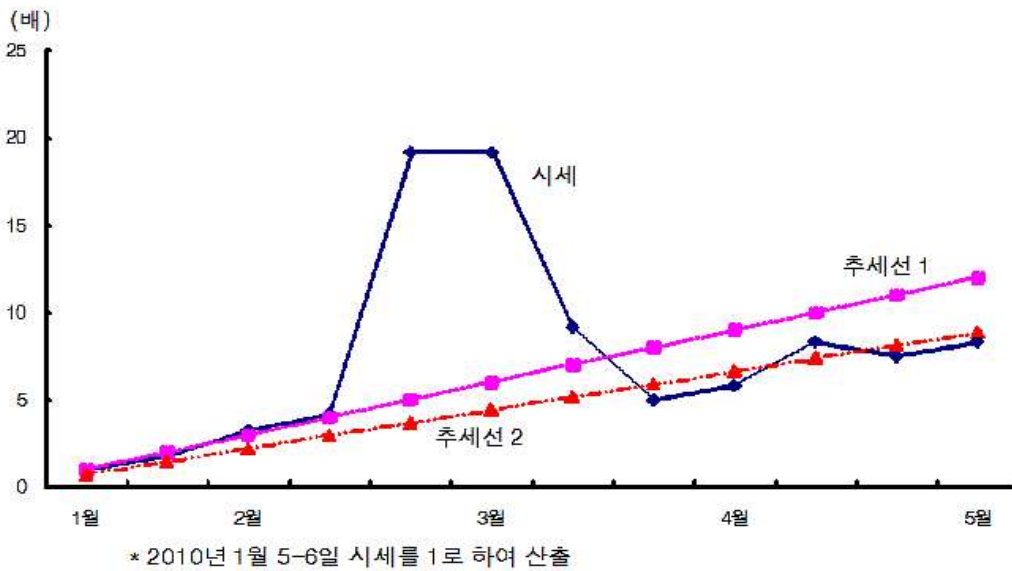
표 1 | 평양의 시장환율과 쌀 가격 추이(2010년 1월~5월)

기간	환율		시장 쌀 가격	
	시세(원/달러)	증가율(배)	시세(원/kg)	증가율(배)
2010.1.5~1.6	120	1.0	120	1.0
1.8~1.14	215	1.8	210	1.8
2.2~2.8	395	3.3	370	3.1
2.17~2.23	500	4.2	470	3.9
2.25~3.3	2,300	19.2	950	7.9
3.2~3.8	2,300	19.2	1,300	10.8
3.9~3.23	1,100	9.2	700	5.8
3.26~4.1	600	5.0	200	1.7
4.1~4.7	700	5.8	450	3.8
4.8~4.26	1,000	8.3	500	4.2
4.26~5.6	900	7.5	400	3.3
5.7~2.25	1,000	8.3	450	3.8
평균		7.7		4.3
표준편차		5.9		2.8

* 증가율은 모두 2010년 1월 5-6일의 시세를 1로 하여 증가율 산출

자료: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page=1&catId=>)

그림 1 | 북한의 시장 환율 추이(2010년 1월~5월)



이와 관련 **표 1**은 매우 흥미롭다. 지난해 연말의 화폐개혁 직후 북한의 시장 환율과 시장 쌀 가격은 모두 급등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들 변수의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1) 시장 환율의 평균적 상승폭이 쌀 가격의 평균 상승 폭 보다 더욱 컸을 뿐만 아니라, 2) 이러한 상승폭의 변동 역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평균 7.7배 상승한 반면, 시장 쌀 가격은 4.3배 정도 상승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상승폭의 표준편차 역시 시장 환율은 5.9에 달하는 반면, 시장 쌀 가격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는 시장 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시장 환율의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제반 가격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시장 환율의 추세와 의미 - 화폐교란, 소비교란 그리고 사회불안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환율의 추세이다. **그림 1**은 올해 1월 초부터 5월 25일까지 북한의 주간 시장 환율 시세를 '시간'에 따라 회귀분석(regression)함으로써 얻어진 추세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추세선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세선 1은 앞서의 전 기간에 걸쳐 관찰된 북한의 주간 시장 환율 시세 모두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이고, 추세선 2는 동 환율 시세에서 상대적으로 특이 수치(outlier)라 할 수 있는 올해 3월의 환율 시세(3월초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 없이 폭등한 이후 4월 다시 급락하기 이전까지의 환율 시세)를 제외한 상태에서 얻어진 추세선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추세선 모두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의 화폐개혁으로 북한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이러한 신뢰도의 하락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달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욕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향후 북한의 시장 식량가격과 같은 여타 명목변수 역시 당분간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 변수는 시장 환율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북경제제재의 영향력 전달 변수로서의 북한의 시장 환율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그것은 앞으로도 북한의 시장 쌀 가격과 같은 명목 변수는, 설사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극단적인 경우 공급이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순수히 화폐적인 이유에서 안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물론 북한사회 역시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역 중단과 같은 한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제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북한, 특히 북한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던 달러의 흐름을 거의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다.¹⁾ 이는 당연히 북한의 달러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북한당국 스스로가 달러 부족에 몰리면, 북한 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어떻게든 환수해 사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달러의 규모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이는, 순수히 화폐적인 현상으로만 보더라도, 북한의 시장 환율을 상승시킬 요인을 갖는다. 만일 이러한 요인이 앞서의 **그림 1**이 보여 주는 추세선과 맞물린다면 향후 북한의 시장 환율과 이에 따른 여타 가격변수의 움직임은 상당한 요동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은 모든 면에서 미스터리한 나라이며, 경제적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환율 및 여타 가격변수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 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제재와 같은 북한의 주변환경 악화가 북한 내부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북한의 시장 환율과 이에 연동된 제반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토대로 관찰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3. 대외경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성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소행설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전격 방문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은 김정일 위원장

1) 이에 대해서는 이번 호 『KDI북한경제리뷰』의 주요 논문으로 게재된 이석, “대북경제제재의 영향: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가능한가?”를 참조하라.

이 1997년 10월 당 비서로 취임한 이후 5번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방중은 2000년 5월에, 2차는 2001년 1월, 3차는 2004년 4월에 그리고 2006년 1월에는 4차 방중이 이루어져 이번 방중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일지에 대해서는 경제자료 참조).

올 초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설이 꾸준히 나돌았지만 이번 방중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안문제로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중국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투자 및 지원 등 경제적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다롄시를 방문해 항만시설을 방문하고 다음으로 텐진의 빈하이신구를 시찰한 것은 나진·선봉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국의 대북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대북투자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동행한 대풍그룹의 초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도 다롄에서 ‘대풍그룹’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중국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북지원 및 투자 등 경제협력 대가로 6자회담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보다 장기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중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이 과연 어느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후진타오 주석은 먼저 북중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제의하였다. 첫째, 고위층의 교류지속, 둘째,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정세 등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강화, 셋째, 경제무역 협력심화, 넷째,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교류 확대, 다섯째, 동북아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문제에서의 협력강화 등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고 신압록강대교의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이라면서 “호혜공영의 원칙아래 북한은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를 환영하고 양국간 실무협력수준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유관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북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밖에도 북중 정상은 별도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과 경제건설 경험을 소개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양국 모두 중점 협력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국경 지역의 인프라건설과 새로운 영역과 방식을 통한 합작을 위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먼저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은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시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은 회담의 공식복귀 선언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북한이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제재해제, 평화협정 등이 이루어져야 복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의 협협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고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적극 요구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제안한 5가지 사항 중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행태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향후 북한의 내정 및 외교문제에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지만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확답은 얻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내정 및 외교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강화를 제안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고 경제 지원 등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경향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내정, 대외관계까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부담감을 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입장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이 의도하는 중국의 지지, 나아가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지원도 당분간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 “<북중 정상회담> 최대의제는 6자회담과 경협”, 「연합뉴스」, 5.6.
- * “김정일 ‘6자회담 유리한 조건 조성 희망’”, 「연합뉴스」, 5.7.
- * “<김정일방중> ‘경협’ 뭉치 논의했나”, 「연합뉴스」, 5.7.
- * “<김정일방중> 북·중 5개 협력방안 논의”, 「연합뉴스」, 5.7.
- * “북·중 경협 본격화되나..북 인사 잇단 방중”, 「연합뉴스」, 5.21.
- * 최준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10.5.14.
- * 배정호 외,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10.5.18.

4. 남북경협

남북관계의 단절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20일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자료를 토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한 발표가 뒤따랐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이 기습적인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추가적인 무력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천명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실린 내용을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의 대북 응징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1)북한선박의 제주해협운항 중단, (2)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3)대북 심리전 재개, (4)PSI 적극 참여, (5)천안함 사건의 UN안보리 회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응징조치에 대해 북한은 즉각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

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즉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측의 대북 응징조치에 대해 총 8개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하였다. 행동조치에는 (1)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2)현 남측정부 임기기간 동안 당국간 대화·접촉 중단, (3)관문점적십자연락 대표 사업 완전 중지, (4)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단절, (5)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 및 남측 관계자 전원추방, (6)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7)남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8)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과 북은 각각 상대방을 향해 다짐한 제재 내지 대응조치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향후의 남과 북은 말 그대로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비록 정부가 이번 대북조치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북한은 이미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를 추방한데 이어 만약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개시하면 “서해지구 북남 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대북 심리전 방송이 개시될 경우 개성공단의 장래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역 중단의 효과

비록 그 장래가 불투명하기는 하나 이번의 대북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배제할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상업적 거래에 속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북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영유아 지원과 지난 해 신종플루의 방역차원에서 북한에 타미플루 등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대북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축소 내지 거래중단이 남북교역 분야에 있어서의 이번 대북조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남북교역의 중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는 남과 북에 있어 너무나도 극명한 비대칭적인 격차를 보인다. 즉 2009년 현재 남과 북의 교역규모는 약 16.8억달러로 이는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총 무역액의 약 0.24%에 불과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치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약 51억

달러) 중 약 32.8%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거의 북측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남북교역에는 총 교역액의 약 57.3%를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교역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번의 대북조치에서 제외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각각 남북한 총교역액 중 약 15.6%와 2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 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반출입 기준)

(단위: %)

연도	거래성 교역			경제협력사업					합계
	일반 교역	위탁가공 교역	소계	개성 공단	금강산	경공업 협력	기타경제 협력	소계	
1989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99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99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992	99.5	0.5	100.0	0.0	0.0	0.0	0.0	0.0	100.0
1993	96.2	3.8	100.0	0.0	0.0	0.0	0.0	0.0	100.0
1994	86.8	13.2	100.0	0.0	0.0	0.0	0.0	0.0	100.0
1995	83.4	16.6	100.0	0.0	0.0	0.0	0.0	0.0	100.0
1996	68.7	31.3	100.0	0.0	0.0	0.0	0.0	0.0	100.0
1997	68.4	31.6	100.0	0.0	0.0	0.0	0.0	0.0	100.0
1998	39.8	38.9	78.7	0.0	20.6	0.0	0.7	21.3	100.0
1999	37.9	42.2	80.1	0.0	17.2	0.0	2.7	19.9	100.0
2000	40.4	47.3	87.7	0.0	5.9	0.0	6.4	12.3	100.0
2001	43.7	49.0	92.6	0.0	3.1	0.0	4.3	7.4	100.0
2002	46.7	46.5	93.2	0.0	3.2	0.0	3.5	6.8	100.0
2003	52.0	43.0	95.1	0.0	3.7	0.0	1.2	4.9	100.0
2004	39.3	40.3	79.6	9.6	9.6	0.0	1.3	20.4	100.0
2005	30.4	30.4	60.8	25.6	12.6	0.0	0.9	39.2	100.0
2006	32.8	27.3	60.0	32.2	6.1	0.0	1.7	40.0	100.0
2007	32.3	23.1	55.4	30.8	8.0	5.0	0.8	44.6	100.0
2008	23.3	23.9	47.2	47.2	3.7	0.7	1.2	52.8	100.0
2009	15.6	25.0	40.6	57.3	0.5	0.0	1.6	59.4	100.0

자료: 통일부,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DI, 2009.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일반+위탁가공)이 중단될 경우 전체 교역의 약 40.6%에 해당하는 6.8억달러가 교역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외화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전면 중단의 경우에도 6.8억달러가 모두 북한의 손실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교역의 경우 북한이 거둔 교역수지 흑자는 모두 북한의 외화수입으로 귀착되나 위탁가공의 경우 가공임 상당액이 외화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2009년에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에 따른 흑자가 2억3천4백만달러이고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약 0.5억달러(관세청의 추정)에 달하므로 만약 현재 발표된 대북조치와 대응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배제하고 전면적인 교역중단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외화획득에 있어 연간 2억8천4백만달러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북한 역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및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충격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간 교역구조로 볼 때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남북간 상품별 교역구조를 보면 일반교역의 경우 농림수산물(고사리, 마늘, 바지락, 가리비, 새우 등)과 모래 그리고 아연 및 석탄 등이 교역품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고 이미 일본과는 무역중단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품목의 수출선 변경을 고려할 경우 중국이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품목들 중 대다수는 중국 역시 수출국의 입장에 있거나 혹은 중국이 수입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한 위탁가공교역의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한국이 위탁가공교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대두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러한 역할을 일본이 담당하였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과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전면적인 무역중단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에 있어 북한이 만성적인 적자국이고 한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흑자가 이러한 부족분을 상당부분 채워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교역중단 조치는 북한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약 4만 2천명의 일자리와 연간 약 4천만달러에 이르는 외화 수입이 걸려있는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특별하다. 이미 남측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개성공단이 주는 적지 않은 실리를 거부하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이 공언한 대로 남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 * “북 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종합)”, 「연합뉴스 , 5.21.
- * “대북 경험 ‘전면중단’ 의미와 파장(종합)”, 「연합뉴스 , 5.24.
- * “‘벼랑끝’ 남북관계..북, ‘관계단절’ 초강수”, 「연합뉴스 , 5.26.
- * “북,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위협(종합)”, 「연합뉴스 , 5.26.
- *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영향분석 , 관세청, 2010.5.
- * 이석,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 KDI 현안분석, KDI, 2010.5.24.
- * 임강택,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10.5.24.

부문별 주요동향 집필진

고일동: 총괄
이 석: 대내경제
김상기: 대외경제
이재호: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동향(4.17~5.26)

대내경제	97
북, 8개 도시 인프라 개발 계획 올해 착수	97
북 학자, 북한 화폐개혁으로 일시 불안정 인정	97
북, 올해 시·군 중심지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실시	98
북, 핵보유국 강조	98
북, 의약품 외부 의존율 60~70%	99
북, '개인' 부동산임차 허용	99
북, 휴대전화 가입자 12만명 돌파	100
북,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및 미국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요구	100
미 CIA, 북 경제 2년 연속 3.7%씩 성장	101
김정일 위원장, 북부지역 산업시찰	101
농업 및 식량	103
독일 농촌개발사, 북한 내 현황 밝혀	103
세계은행, 북 5세 이하 유아 17.8%가 영양실조	103
북 남흥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	103
WHO 사무총장, "북 보건의료 개선 인상적"	104
유엔, 대북 식량 지원 6월말 소진	104
대북 매체, 북 식량난 고난의 행군때와 비슷	105
대외경제	106
북 라선시-몽골, 경제무역협조 양해문 체결	106
미, "북 핵보유국 인정 못해, 핵포기시 안전보장 인센티브 제공"	106
중 훈춘-북 라선-러 잇는 '3국 관광' 추진	107
중, 북한 변경관광 5년 만에 재개	108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을 종교자유탄압국으로 지정 권고	108
중, 변경무역에 위안화결제 허용	109

미, 북-미 민간교류 축소	109
북 무역은행, 채무 변제 못해 미 법원에 피소	109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	110
북중, 5개 협력방안 합의	111
대북 매체, “북, 중국 기업에 탄광운영권 넘겨”	112
북, 1/4분기 대중 무역적자 2억3천만달러	112
UNDP, ‘2011~15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112
싱가포르 기업, 북 유전개발에 참여	113
중, 훈춘-라진-상하이 해상항로 개설	113
미 하원위원, 북한 테러국 재지정 법안 제출	114
연론,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최	114
남북경협	115
주한 EUCCK 소장, “남북경협 폐기, 북중 경제특구 대체”	115
2010년 1분기 남북교역, 작년대비 89% 증가	115
민·군 합조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116
북 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	116
남북포럼, 남북교역 전면중단시 투자손실 5조원	117
정부, 대북제재조치로 북 선박금지·교역중단·방북불허	117
이명박 대통령, “남북경협 중단”	118
북, 한국의 ‘대북조치’ 에 대한 행동조치 발표	118
북,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밝혀	119

대내경제

북, 8개 도시 인프라 개발 계획 올해 착수

4월 17일 「연합뉴스」는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박철수 총재의 일본 「교도통신」과의 16일 인터뷰를 인용하여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200억달러 상당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올해 착수했다고 보도. 박 총재는 이 개발계획에 한국, 일본 및 다른 이웃국가 기업들의 투자를 희망하며 나아가 이 계획이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 설립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유엔 제재로 인한 투자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교도통신」의 지적에 박 총재는 “대풍그룹의 활동은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17).

북 학자, 북한 화폐개혁으로 일시 불안정 인정

4월 18일 「연합뉴스」는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의 「교도통신」 인터뷰를 인용하여 북한 내에서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은 조금도 없었고 불안정한 상황도 바로 수습됐다”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에 관해선 “가격조정을 비롯한 관련조치가 (화폐개혁을 시행하면서)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당국이 화폐개혁 후 원활한 경제관리를 위해 일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인하, 비효율적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경공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것을 장려하고 통화유통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18).

북, 올해 시·군 중심지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실시

4월 19일 「연합뉴스」는 「조선신보」의 19일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올해말까지 지방의 각 시·군 소재지(행정중심지)까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함. 「조선신보」는 “평양-향산, 평양-남포의 고속도로를 비롯해 평양에서 뻗치는 주요 도로와 철도 구간, 각 도 소재지에 통신망이 꾸려졌고 시, 군 소재지도 절반이상은 통신망이 정비됐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현재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만 가능한 북한의 휴대전화에 ‘3세대 이동통신’을 도입해 TV시청, 동영상, 음악전송 등을 가능, 가입비와 통화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 등의 이동통신 이용요금도 낮출 예정이며 휴대전화 단말기의 자체생산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19).

북, 핵보유국 강조

4월 21일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 발표 형식으로 핵보유국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1일 「연합뉴스」는 보도.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 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외무성은 이어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전함. 앞서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이틀 뒤인 11일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말해 ‘북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외무성은 또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외무성은 “조선의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며 “조선은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전함. 북한은 이번에 비망록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6자회담이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주된 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있다”며 “북핵문제의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그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1).

북, 의약품 외부 의존율 60~70%

4월 22일 「연합뉴스」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북한은 필수 의약품의 제조와 공급 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60~70%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22일자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 「자유아시아방송」은 IFRC 관계자를 인용하여 북한은 “도시나 큰 마을의 병원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소량의 약과 의료장비를 지원받지만, 이것만으로는 주민들의 필요량을 전혀 충족할 수 없다”며 이어 “북한의 높은 의약품 대외의존도로 인해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북한과 계약”하여 “올 상반기 리, 군 단위 병원 2,100곳에 진통제, 해열제, 항생제 등 기본 의약품만으로 구성된 의약품 세트 2,398개를 직접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전함(「연합뉴스」, 4.22).

북, ‘개인’ 부동산임차 허용

4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작년 11월 11일 총 6장 47조의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해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함. 「연합뉴스」는 1996년 제정된 ‘사회주의재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이용자 범위가 ‘기관, 기업소, 단체’로 국한돼 있지만 ‘부동산관리법’은 여기에다 ‘공민(개인)’을 추가해 주목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는 북한의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기관지인 「민주조선」에 따르면 새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다른 기관·사업소·단체·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전함. 또한 이 법은 부동산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사용료를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했고, 부동산의 등록 절차를 그 주체에 따라 ‘자체등록(이용기관·기업소·단체)’과 ‘국가등록(관리기관)’으로 이원화해 ‘현물과 화폐(부동산 정보와 가격)’ 두 가지

를 등록하되 ‘화폐’가 불가능하면 ‘현물’만 하도록 규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아울러 내각에 비상설기구로 ‘국가부동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 관리사업 지도는 내각의 지휘 아래 해당 중앙기관이, 부동산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이 분담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8).

북, 휴대전화 가입자 12만명 돌파

5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2010년 1/4분기 실적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고려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은 2010년 3월 31일 기준으로 125,661명이라고 보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3월까지 약 3만4천명이 「고려링크」에 신규가입하였고, 이것은 2009년 말 집계 90,740명과 비교해 약 37%가 증가한 수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보도. 「오라스콤」은 북한 내 가입자들의 1일당 한 달 평균 통화시간은 311분(전분기 대비 72분 증가)이며 「고려링크」의 총 매출액은 900만달러(전분기 대비 20% 증가, 작년도 동분기 200%(450만달러) 증가), 세전이익은 약 590만달러라고 밝힘. 「오라스콤」측은 화폐개혁으로 모든 「고려링크」대리점이 3주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관측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내 정상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함. 「고려링크」는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이동통신 회사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12).

북,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및 미국에 평화보장체계 수립 요구

5월 12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12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북한은 핵융합 반응 성공으로 “새 에너지 개발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평가했으나, 유사시 핵융합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제조의 원천기술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로동신문」은 이어 “과학자들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면서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덧붙임. 신문은 또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 기술은 오늘 세계 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다”고 자평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편 13일 「로동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급선무’라는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대결을 끝장내기 위한 급선무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5월 13일 「연합뉴스」는 보도. 「로동신문」은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2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에게 가해진 국제사회의 체제를 풀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쓴지 오래됐을 것”이라면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은 우리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2; 13).

미 CIA, 북 경제 2년 연속 3.7%씩 성장

5월 19일 「연합뉴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10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을 통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7% 증가했다고 추정했고, 이는 2007년 2.3%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째 성장세를 보인 것이며 성장세의 이유로는 유리한 기후 및 주변국의 에너지 원조 등을 꼽았다고 보도. 북한의 성장세는 조사대상 213개 국가 중 47위였고 한국은 0.2%에 올라 108위에 그쳤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그러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GDP는 지난해 1,900달러로 조사대상국 227개국 중 188위에 머물렀고, 이것은 2008년 1,800달러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만8천달러로 49위였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5.19).

김정일 위원장, 북부지역 산업시찰

「연합뉴스」는 5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5.3~7) 직후 평양에서 경희극 ‘산울림’ 공연을 관람한 것을 제외하고 이달 중순부터 량강도에 이어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을 돌며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이 량강도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16일 보도)을 시작으로 삼지연군·백암군(18일), 혜산시·대흥단군(19일)을 시찰했으며 뒤이어 20일에는 함경북도 어랑군의 어랑천발전소 건설장과 청진시의 청진토끼중축장 및 관모봉기계공장, 21

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함흥시를 돌아봤다고 밝혔다고 전함. 북한이 현 천안함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전면전 불사'를 외치는 긴장국면 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평양을 떠나 북부지역의 산업시설을 둘러보면서 '경제 살리기'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는 덧붙임(「연합뉴스 , 5.21).

농업 및 식량

독일 농촌개발사, 북한 내 현황 밝혀

4월 21일 「중앙일보」는 2005년 북한에 들어가 5년 동안 지방을 방문하며 농촌개발사로 농업지원활동을 수행한 독일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의 카린 안츠 박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북한 내의 현황을 보도. 안츠 박사는 화폐개혁 직후 북한 내에는 혼란스러운 환율 및 시장 마비가 일어났으며, 새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농민들은 식량을 팔지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보도. 핵실험과 유엔 제재의 영향으로 안츠 박사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꼽았으며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망적이지는 않아 보였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전함(「중앙일보」, 4.21).

세계은행, 북 5세 이하 유아 17.8%가 영양실조

4월 21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1일 보도를 인용하여 세계 각국의 발전 정도를 경제, 교육, 건강 등의 지수로 나눈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 2010' 보고서에서 북한의 5세 이하 유아 가운데 2003~08년까지 영양실조로 저체중인 유아의 비율은 전체의 17.8%에 이르고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북한 유아의 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1천 명당 55명으로, 18년 전인 1990년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 「자유아시아방송」은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북한 산모의 수는 2005년 기준 10만 명당 370명으로 몽골 46명, 중국 45명, 한국 14명, 일본 6명과 비교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았다”고 보도하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1).

북 남흥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

「연합뉴스」는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29일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갖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본격 가동했다고 전함. 「중앙통신」은 29일 보도에서 “무연탄 가스화의 완성에 의해 나프타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방식보다 원가를 2배 이상으로 줄이면서도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고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북한의 비료생산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르고, 무연탄을 이용한 비료생산공정의 가동은 만성적인 비료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4.29).

WHO 사무총장, “북 보건의료 개선 인상적”

5월 1일 「연합뉴스」는 지난 4월 26~29일 방북한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찬 사무총장과 30일 전화회견을 인용해 “북한의 의료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WHO와 한국정부가 함께 북한 의료 인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남북 양측의 대화와 신뢰 구축에도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찬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고, 병원 내 감염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중보건상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며 이 외에도 모자보건 사업, 말라리아 예방 사업, 북한 당국의 신종플루 대응 실태 및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진전을 좋게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그러나 “의료 관련 기간시설과 장비의 질적 개선 및 적절한 약품과 의료용품 등의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정부 역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

유엔, 대북 식량 지원 6월말 소진

「연합뉴스」는 5월 3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베이징 주재 레나 사벨리 대변인의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통해 6월말 즈음에 유엔의 대북 식량 지원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벨리 대변인은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증자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WFP는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 공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전함.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최소한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WFP는 기금 부족으로 당초 예상했던 620만명보다 적은 150만명

의 북한 주민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 는 덧붙임(「연합뉴스 , 5.3).

대북 매체, 북 식량난 고난의 행군때와 비슷

5월 10일 「연합뉴스 는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 의 보도를 인용해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함. 「자유북한방송 은 중국 지린성의 통신원을 인용해 “중국에 건너온 북한 주민이 ‘며칠 전 장군님(김정일)이 중국에 갔다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식량 원조를 주지 않으면 무리죽음(떼죽음) 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 는 전함.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래 두만강을 건넜다는 이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난을 밝히며 함경남도 단천과 같은 내륙지역은 북경지역보다 정말 심한 상황이라고 「자유북한방송 에 말했다고 「연합뉴스 는 전함(「연합뉴스 , 5.10).

대외경제

북 라선시-몽골, 경제무역협조 양해문 체결

4월 21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의 라선시와 몽골의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부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이 21일 라선시에서 체결됐다고 전함. 「조선중앙통신」은 양해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체결식에는 김수열 라선시 인민위원장과 방북 중인 몽골의 곰보자빈 잔단샤타르 외교장관 등이 참석, 김 인민위원장과 아마르자르갈 간수호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부 차관이 양해문에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1).

미, “북 핵보유국 인정 못해, 핵포기시 안전보장 인센티브 제공”

4월 22일 「연합뉴스」는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이 21일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비단 미국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 세이모어 조정관은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올바른 장(場)”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 한편 4월 23일 「연합뉴스」는 엘런 타우셔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이 22일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는 대북 핵무기 사용여부에 대해 기준과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시 안전보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타우셔 차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의 NPR 보고서 청문회에서 “NPR는 비확산 목표를 추동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를 위해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개념을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비핵국가는 미국의 핵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 타우셔 차관은 “하지만 진전된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이 핵무기보유국이나 북한, 이란처럼 NPT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현재 미국의 핵무기 사용 정책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계산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 그는 “하지만 NPR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언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임. 한편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미국은 1978년 NPT 가입을 전제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안하고 약속해왔지만, 이번 NPR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국가는 NPT 가입뿐 아니라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4.22).

중 훈춘-북 라선-러 잇는 ‘3국 관광’ 추진

4월 23일 「연합뉴스」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산장(三疆)국제여행사와 러시아의 극동국제연합부, 북한의 라선관광회사가 공동으로 훈춘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슬라반카와 하산, 북한의 두만강시와 라선시를 잇는 ‘3국 관광’ 루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훈춘시 여유국은 다음 달 ‘5.1절’ 연휴를 전후해 관광단을 모집하여 이 노선 관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밝힘. 연변주도 훈춘에서 라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관광 노선은 단둥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노선과 연변에서 산허(三合)-청진, 칠보산을 가는 코스, 백두산-삼지연-평양을 잇는 코스 등에 불과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4.23).

중, 북한 변경관광 5년 만에 재개

4월 28일 「연합뉴스 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공안부와 감찰부, 국가여유국이 최근 연변주의 북한관광에 대한 통행증발급의 시범적 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연합뉴스 는 연변주 관계자를 인용하여 “시범적이라는 꼬리가 붙었지만 북한 변경관광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와 관련하여 연변주 여유국과 공안국은 27일 회의를 열어 북한 변경관광의 안전을 위해 변경관광을 진행하는 30여개 여행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변경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연합뉴스 는 보도. 중국 당국은 2005년 연변지역의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을 금지, 2006년에는 북한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랴오닝(遼寧)성 및 단둥(丹東)을 시작으로 투먼(圖們), 안투(安圖)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북한 변경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며 지난 12일부터 북한 단체관광도 전면 허용했다고 「연합뉴스 는 덧붙임(「연합뉴스 , 4.28).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을 종교자유탄압국으로 지정 권고

4월 30일 「연합뉴스 는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가 29일 발표한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미얀마, 중국 등 13개국을 종교자유 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전함. 「USCIRF 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대 4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고 「연합뉴스 는 전함. 「USCIRF 는 미국 정부에게 6자회담에 종교자유를 포함하여 이 분야의 진전을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 정치, 외교적 지원과 연계시킬 것을 촉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비슷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도 권고했다고 「연합뉴스 는 밝힘. 보고서는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 망명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및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중국이 지지하도록 미국 정부가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는 전함.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가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는 덧붙임(「연합뉴스 , 4.30).

중, 변경무역에 위안화결제 허용

5월 3일 「연합뉴스」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동북3성을 포함해 네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신장(新疆), 시짱(西藏.티베트), 윈난(云南) 등의 수출 기업이 85개의 지정된 장소에서 인근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위안화 결제금액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 「연합뉴스」는 3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이번 규정에 해당되는 국가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이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접하고 있는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이른바 동북3성과의 변경무역이 해당되며,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정하자 그 이전에 허용해왔던 북한과의 변경무역 위안화 결제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5.3).

미, 북-미 민간교류 축소

5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해 활발했던 미국 내 학술, 종교, 경제 및 문화 민간단체들의 방북활동이 올해들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보도. 「자유아시아방송」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6자회담의 복귀를 선언하지 않고 한국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6자회담 외의 대북민간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민간교류마저 자제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미국 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도 현재 진행을 시작한 사업만을 전개할 뿐 새로운 민간 교류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보도. 작년 미-북 민간교류는 1월 북한 김책공업 종합대학의 홍서헌 총창 및 대표단의 방미, 10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 및 리근 국장의 방미 및 12월 민간연구개발재단(CRDF) 및 미 과학자 대표단의 방북 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4).

북 무역은행, 채무 변제 못해 미 법원에 피소

5월 5일 「연합뉴스」는 대만의 메가인터넷네셔널커머셜뱅크(MICB)가 지난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15일 원고인 MICB와 피고 조선무역은행 측에 7일까지 소송상황 요약서(status letter) 및 소송진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오는 1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함. 「연합뉴스」가 현지시간 4일에 입수한 MICB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당시 총 500만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뉴욕 소재 MICB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기로 약정했지만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천달러, 2월에 원금 10만달러, 4, 5월에도 각각 원금 10만달러 등 모두 46만2천달러 가량을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MICB는 설리번&위세스터 LLP를 법정 대리인으로 해서 남은 원금 470만달러와 상환기간일까지의 이자 및 그 이후의 연체 이자 178만4,300여달러 등 총 65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연합뉴스」는 밝힘(「연합뉴스」, 5.5).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

5월 8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이 5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두 정상은 북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함. 이날 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통적인 중북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중북선린우호협조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두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북중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 시킬 데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또한 두 정상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북중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공동성명의 입장에 따라 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6자회담의 유관국들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덧붙임. 이날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북한은 각측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한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전함.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회견에서 북중간의 경제무역협조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였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5월 7일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전 중국의 동북지역을 방문하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보도. 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련시와 천진시를 방문하고 대련빙산그룹,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천진항, 천진시내 등을 참관하였으며 귀국길에는 심양시를 방문하여 심양송풍기유한공사 등을 참관하였다고 밝힘. 한편 금번 방중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김영일, 김양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주규창,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 리명수, 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중수, 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가 수행하였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중앙통신」, 5.7; 8).

북중, 5개 협력방안 합의

5월 7일 「연합뉴스」는 지난 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내정·외교문제,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정세, 북-중 경제무역협력을 심화 등과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을 포함한 5가지 제안을 내렸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경제무역협력에 대해서는 “신 압록강대교의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라면서 “호혜공영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양국간 실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5.7).

대북 매체, “북, 중국 기업에 탄광운영권 넘겨”

5월 10일 「연합뉴스」는 대북매체인 「데일리NK」의 10일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함경북도 내 탄광을 중국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업소의 당 기관이 운영했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중국기업에 넘겨주었다고 전함. 「데일리NK」의 중국소식통은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최근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에 대해 중국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인사, 자재, 근로방식 등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권을 중국기업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NK」는 보도, 또한 소식통은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좋아지면서 출근율과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갱도 내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루 백미 900g 및 돼지고기, 달걀 등이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0).

북, 1/4분기 대중 무역적자 2억3천만달러

5월 11일 「연합뉴스」는 11일 「미국의 소리(VOA)」가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의 올해 1/4분기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억3,200만달러로 작년 동기 1억5,300만달러 보다 51.6% 늘어났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은 3억5,9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1억2,700만달러로 17% 축소, 월별로는 수입은 1월-1억1,200만달러, 2월-1억1,700만달러, 3월-1억3천만달러였고, 수출은 1월-3,600만달러, 2월-3,500만달러, 3월-5,60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미국의 소리」는 양국간의 교역액은 지난해 4억5,700만달러에서 올해 4억8,600만달러로 6.3%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15억달러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1).

UNDP, ‘2011~15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5월 11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에 제출된 ‘2011~2015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을 인용하여 “UNDP가 북한 당국자들의 경제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무성 관리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세금, 외환, 외채관리, 회계, 감사 등 분야의 국제 관습을 교육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도 이

런 내용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함. 또한 UNDP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의 관계자들에게 금융업과 국제 자본시장, 자산과 위험관리 등을 교육하고, 무역 및 투자 관련 법제와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전함. UNDP는 이밖에 작물 재배의 다양화에 집중하여 종자 증식 및 채소 생산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며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자연재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1).

싱가포르 기업, 북 유전개발에 참여

5월 12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조선에너지(Chosun Energy Pte Ltd)'사가 영국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의 북한 동해유전 사업 지분 중 절반을 인수했다며 "아미넥스의 개발 사업권과 유전 채굴기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각각 미화 50만달러씩 총 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해 최근 76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이어 「자유아시아방송」은 "아미넥스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동해상의 5만8천km² 광구 개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상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유전 탐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2).

중, 훈춘-라진-상하이 해상항로 개설

5월 12일 「연합뉴스」는 중국 국가 해관총서가 최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 라진항-상하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항로의 개설을 승인했다고 12일 「연변일보」가 보도했다고 전함. 이것은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의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해 뱃길이 열리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 항로는 지난 3월 착공한 훈춘-북한 원정리 간 두만강 다리 보수 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7월 개통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훈춘에서 생산되는 10만톤의 석탄을 이 항로를 이용해 상하이와 이가오차오(外高橋) 부두를 통해 남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2).

미 하원위원, 북한 테러국 재지정 법안 제출

5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46명의 희생자를 낸 한국 천안함 침몰사태가 북한 어뢰에 기인하였다는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로스-레티넨 의원은 미 국무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천안함 침몰사태로 확인되었고, 북한의 행위와 정책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안보 및 이익을 해친다는 새로운 사실이 들어나고 있기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즉시 재지정하고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은 보도(「자유아시아방송(RFA) , 5.20).

연론,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최

5월 22일 「연합뉴스 는 「단둥신문망(丹東新聞網) 의 22일 보도를 인용하여 제13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람회가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고 전함. 「단둥신문망 은 지난 17일~20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전람회에 중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16개국 기업이 참가, 전자와 기계제조, 방직 의류, 농산품, 석유화학, 자동차 및 차량부품, 가전제품 등 총 324개의 부스를 운영했고, 그 중 186개(57%) 부스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 는 보도. 단둥시 경제무역대표단은 전람회 기간 오수용 북한 내각 부총리와 이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 이학권 북한상회 회장 등과 면담, 북한과 단둥시 간의 경제무역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올가을 단둥에서 ‘대북한 수출입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 는 전함(「연합뉴스 , 5.22).

남북경협

주한 EUCCK 소장, “남북경협 폐기, 북중 경제특구 대체”

4월 26일 「한국일보」는 장 자크 그로하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K)소장 겸 세계유럽비즈니스기구(EBO) 회장과의 25일 이메일 인터뷰를 인용하여 “북한과 중국이 라선과 신의주 등 북중 국경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폐기되고, 북중간 경제특구 개발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로하 소장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남북경협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정당과 사회·산업계 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선과 신의주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강력하고 투명한 법률체계의 정비는 당연한 요건이고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잠재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그로하 소장은 밝혔다. 그는 또한 “서방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게 지역적 비교우위와 차별적 경쟁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며 신의주는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제공, 라선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국경에서처럼 이상적인 물류 및 프로세싱 특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함(「한국일보」, 4.26).

2010년 1분기 남북교역, 작년대비 89% 증가

4월 28일 「연합뉴스」는 관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달 남북교역 규모는 2억40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824만달러)보다 88.5%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침체 전인 2008년 3월(1억5,726만달러)보다도 29.7% 많은 것이라고 보도. 지난달 남북교역 중 반출건수는 4,586건, 반출금액은 8,436만달러였고 반입건수는 4,085건, 반출금액은 1억1,967만달러였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또한 남북 교역수지는 3,531만달러 적자로 이 규모는 2008

년 10월(3,539만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교역 경로는 도라산 육로가 많이 이용돼 전체 교역액의 67.6%(1억3,798만달러)를 차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로써 1분기 남북교역의 누적 규모는 5억2,67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2천66만 달러)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집계, 올 1분기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6억6천608만 달러)의 31.6%에 달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6).

민·군 합조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5월 20일 「연합뉴스」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중어뢰의 수중폭발에 따른 충격파로 천안함이 침몰했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어뢰 공격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천안함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으며 이것은 함수·함미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점,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 등의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생존자들의 진술 및 지진파·공중음파는 수중폭발과 일치하다고 밝혔고, 북한의 어뢰를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 추진동력부의 북한식 표기방법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북한군은 모두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해의 북한 해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이후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한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어뢰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0).

북 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

5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1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공화국 정부당국을 대변’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과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

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했다고 전함. 조평통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다"며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과편과 (알루미늄) 늪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이것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조평통은 "우리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1).

남북포럼, 남북교역 전면중단시 투자손실 5조원

5월 23일 「연합뉴스」는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이 23일 남북교역 전면 중단시 29만6천여명의 고용감소와 5조360억원의 투자손실, 5조9,720억원의 연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남북포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북교역 전면 중단시 개성공단의 경우 약 1조4,2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손실, 26만명의 고용감소 등이 예상되며 현재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투자손실 2조원, 협력업체를 포함한 연매출손실 3,320억원, 고용감소 3만명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 일반 대북교역과 임가공, 경협투자 등에서도 7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 2조8,800억원의 매출손실, 6천명의 고용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3).

정부, 대북제재조치로 북 선박금지·교역중단·방북불허

5월 24일 「연합뉴스」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4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참석하는 3개 부처 합동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한국 국민의 방북도 일체 불허되며, 대북 신규투자도 금지,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및 북 주민 접촉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북측이 어느 수준의 사과를 해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춰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24).

이명박 대통령, “남북경협 중단”

5월 24일 「연합뉴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측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연합뉴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통일부가 밝힌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반입(수입) 규모가 2억4,519만달러로 북측은 이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또한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및 연간 60억 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이번 조치의 대북 압박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남북 교역·경협 중단으로 상당수 북측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반면,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북사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과 위탁가공업체의 경우 이미 원·부자재를 북측에 보냈는데 완제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4).

북, 한국의 ‘대북조치’ 에 대한 행동조치 발표

5월 26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25일 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한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고, 행동조치에는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 있다고 보도. 조평통은 특히 “이제부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이번 조치가 1단계임을 밝혀 북측의 추가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5.26).

북,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밝혀

5월 26일 「연합뉴스 는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이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확성기 설치는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연합뉴스 는 북한의 이같은 경고는 심리전 재개시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북측 대표단장은 또 “만약 남측이 뼈라(전단)살포행위를 의연히 계속하고 심리전 방송까지 재개하면 즉시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우리 군대의 강경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는 전함(「연합뉴스 , 5.26).

자료정리 : 김 설